

# 2007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

## - 세부추진방향 -

〈편집자 주〉

“제32차 원자력 안전위원회 (’06.12.6(수))”에서 「2007년도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방향」이 의결되어 방사선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.

### 1. 최상의 원자력 안전수준 유지

#### 가. 원자력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

#### 나. 장기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

#### 다. 원자력시설에 대한 엄격한 안전성 심·검사

#### 라. 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 심사

### 2. 안전규제 제도 및 체계의 지속 발전

#### 가. 최신 기술 기반의 안전규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

#### 나. 효과적인 방사선안전규제 체계 마련

- 방사선 위험도 및 안전관리 실적에 따른 차등검사제 확대 적용

- 방사능오염 재활용 고철 등 무적선원 관리체계 구축

- ICRP 신권고안 적용 검토 등 방사선 안전규범 지속 개선

- 권역별 방사선안전전문가와 연계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 구축

#### 다. 부지별 방사능 방재 역량 강화

#### 라. 전국토환경방사선감시 역량 강화

- 전국 38개 지점의 환경방사능 지속 감시

- 대기 부유진, 낙진, 빗물 및 상수원의 방사능 집중 감시

- 주변국 원자력활동 탐지능력 강화  
- 환경방사능감시기 확대 운영 및 제논 탐지능력 확보

#### 마.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체제 구축기술 개발

### 3. 안전규제 기술력 제고와 국제화

- 가. 미래형 원자력시설 규제기술 개발
- 나. 물리적 방호 규제기술 개발
- 다. 글로벌 안전체제에서의 활동 강화 및 국제신인도 제고
- 라. 비파괴검사기술 기반 구축
  -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기타 검사자에 대한 경력관리
  - 비파괴검사업 등록·변경등록 및 비파괴검사 실태조사
  - 정보관리체계 구축 추진

### 4. 안전문화 창달과 국민신뢰 정착

- 가. 종사자 안전문화의식 제고를 통한 인적실수 저감
  - 원자력시설별 안전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·세미나 등의 활성화
    - 원자력안전의 날(9월 중) 및 원자력안전점검의 날(매월 첫째주 화요일)을 통한 안전문화의식 고취
- 나. 원자력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홍보 강화
- 다. 청소년층 대상의 방사선체험사업 시행
  - 전국 초·중·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선측정 체험학습기회 마련
  - 체험학습용 콘텐츠 개발·운영, 체험학습효과 분석 등

## 【2006년도 추진성과 세부내용】

### 1. 최신 규제기법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

#### □ 방사선안전 관리체계의 선진화

- RI 이용시설(2,521건), 방사성물질 운반(166건), 방사선기기(136건) 등 총 2,867건에 대한 방사선시설 안전성 심·검사('06.10월말 현재)
- 방사선안전 규제체도의 합리화('06.12)
  - 위험도 및 자율 안전관리 실적에 따른 검사 방법 차등화 등
  - 일부로 원자력법시행령 제197조, 제199조, 제237조 개정('06.6.30)
    - ※ 시설검사에 서면심사 도입, 정기검사에 서면심사 대상 확대 및 운반 정기검사에 서면심사 신규 도입
- 방사선작업종사자(27,500여명)의 평생 안전관리 체계 구축('06.12)
  - 방사선작업종사자 역학조사 DB 구축 및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(약 2400명) 완료('06.10)
  - 개인 방사선안전정보(피폭기록·건강검진·교육훈련 등) 통합관리
- 비파괴검사업체 종사자(3,400여명) 방사선피폭 저감화 추진('06.12)
  - 작업장(400여개) 환경평가 등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
### 2. 현장중심의 종합적인 원자력방호·방재 기반 구축

#### 가.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테러 대응체제 강화

- 원자력시설·방사선원의 보안 및 테러 예방체제 가동
  - 사고대비 방사선원(889개) 위치추적시스템 전면 가동('06.3)
  - ※ 총 953개('06.10 기준) 방사선원에 대한 시스템 운영율 98.8%
-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국가 물리적 방호체제 기본계획 수립('06.12)

**나. 환경방사능감시망 활동 강화**

-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(IERNet) 장비교체 및 점검
  - 통신망변경(공용통신에서 전용통신으로 회선변경)
  - 구형 감시기 6개 신형 교체, 감시기 교정 및 점검('06.4~9)
- 지방 및 중앙측정소 시설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
  - 해수 채집기 설치 및 검수(3.29), 액체섬광계수기 수리(7.26) 등
- 비상시 환경방사능감시 체제 및 능력 확보
  - 영광 합동훈련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설치·운영('06.3)
  - 북핵 실험이후 비상대응 계획 수립, 비상 감시업무 수행('06.10.9~)
- IAEA 및 일본(JCAC), 중국(RMTC) 과 방사능 교차분석

**3. 안전규제 품질경영 체제 수립·이행**

**가. 안전규제 품질경영 정책 수립 및 규제활동에 적용**

- 안전규제 전문기관의 품질경영체제

구축과 시행

- 규제업무 품질제고를 위해 품질경영계획서, 업무표준, 지침서 및 절차서 등으로 구성된 품질경영체제 구축('06.1) 및 정비('06.12)
- 품질경영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('06.7) 및 연차평가('06.11) 실시

**나. 규제업무 효율화를 위한 첨단시스템 구축 및 운영**

- 유비쿼터스 개념의 방재지원시스템 개발
  - 현장중심의 기술지원 Mobile 시스템 구축('06.11)
- 첨단 국가 방사선안전관리시스템 구축
  -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(RASIS) 기능 개선
  - 현장 방사선안전진단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시스템의 도입 추진

**4. 국민에게 다가가는 안전규제**

**가. 국민과의 대화채널 지속 유지**

- 제12회 『원자력안전의날』 및 『원자력 안전포럼』 개최
  - 1회 포럼(6월) 주제 : 글로벌 원자력안전체제와 우리의 대응
  - 2회 포럼(9월) 주제 : 안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중 커뮤니케이션
  - 3회 포럼(11월) 주제 : 원자력안전과 주민참여
- 『방사선체험사업』의 지속 운영('06년 전국 50개 학교)

정책과 통계

나. 원자력안전정보의 대국민 공개 확대

-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사이버시스템 (nisc.kins.re.kr) 개편, E-mail 클럽 확대(2,500→3,000명) 및 원전 지역에 안전정보 검색대 운영(6대)
-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
  - 안전관련 질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 실시(접수 후 7일 이내)
  - 원자력안전 열린마당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('06.8)

5. 국제사회와의 원자력안전 협력 강화

□ 국제규범 준수 및 투명성 강화

-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제2차 검토회의('06.5) 참가
- IAEA 안전기준위원회(CSS) 및 OECD/NEA 규제활동위원회에 지속 참석하여 국제 안전기준 제정에 기여

KRIA

